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5
------------------------	---

【주 제】 복지 표플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 제 발 표】

김 용 하 교수	7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 론 문】

조 성 환 교수	33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 정 학 교수	37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김 상 철 교수	43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 연 혁 교수	53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61
---	----

프로그램

1 부

사회 :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격 려 사.....이 갑 산 명예회장 범사회시민단체연합
- 5) 축 사김 상 훈 국회의원
- 6)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복지 표플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 토 론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김 용 하 교수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정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기 위해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김용하교수님을 비롯하여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4년 만에 정부 예산이 50%나 늘었습니다. 출범 당시 400조원이던 정부예산이 올해 두차례 추경으로 60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가부채도 내년에 1000조원 이상이 됩니다.

올바른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쟁취를 위한 진영대결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복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의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포퓰리즘은 국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는데 오히려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복지정책은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결국 과도하게 끌어모아 사용한 복지비용을 미래 세대에게서 충당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곧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과열된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크게 늘어난 발생한 복지비용의 충당 방안을 논의하고 또 앞으로 건전한 복지정책을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성장을 위한 많은 토론과 제언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상 훈

[주 제 발 표]

복지 표플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 용 하 교 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제 4대 한국연금학회 회장

제 14대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복지 포퓰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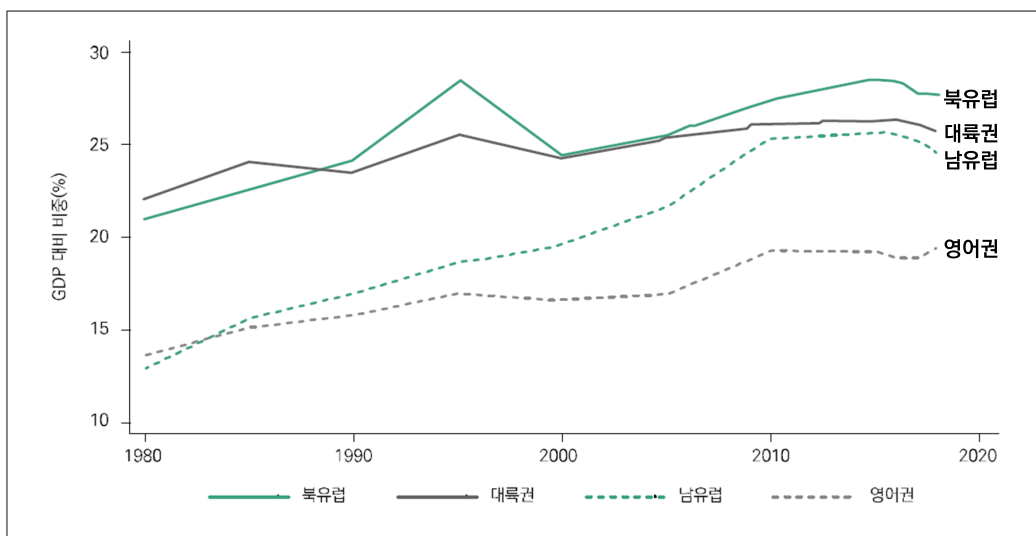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복지 포퓰리즘?

포퓰리즘 (Populism)

- 포퓰리즘(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은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며 주장하는 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
 - ✓ ‘대중의 자기 책임과 유리된 요구에 영합하는 재정팽창적, 재분배적인 정책’ 의미
 - * 선거철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재원대책 없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
- 복지 포퓰리즘은 복지급여 대상, 수준에 있어 재원 조달방안,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구호 차원에서 제시하는 低부담(혹은 無부담) 高복지
 - ✓ 재원조달 방안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들이 추가적인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 부담에 동의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음

복지지출 비중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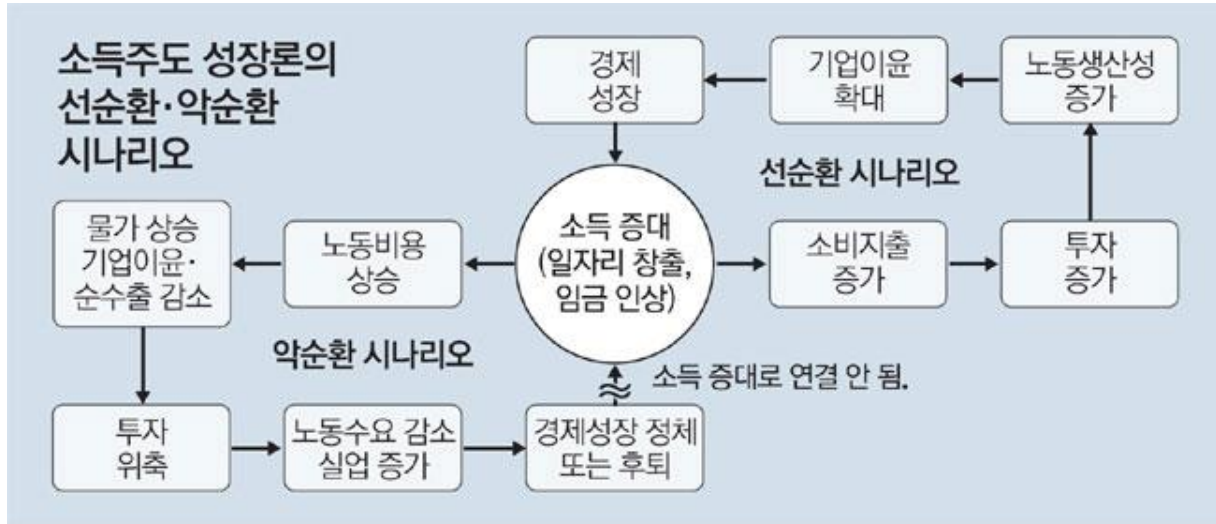
자료: OECD

I. 소득주도성장 : No Product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소득주도 성장 시나리오 : 선순환 or 악순환



실패 1 :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축 + 소상공인 폐업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형태

1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2 고용 감축

음식·숙박·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주 노동, 가족노동 증대

3 상여금의 기본급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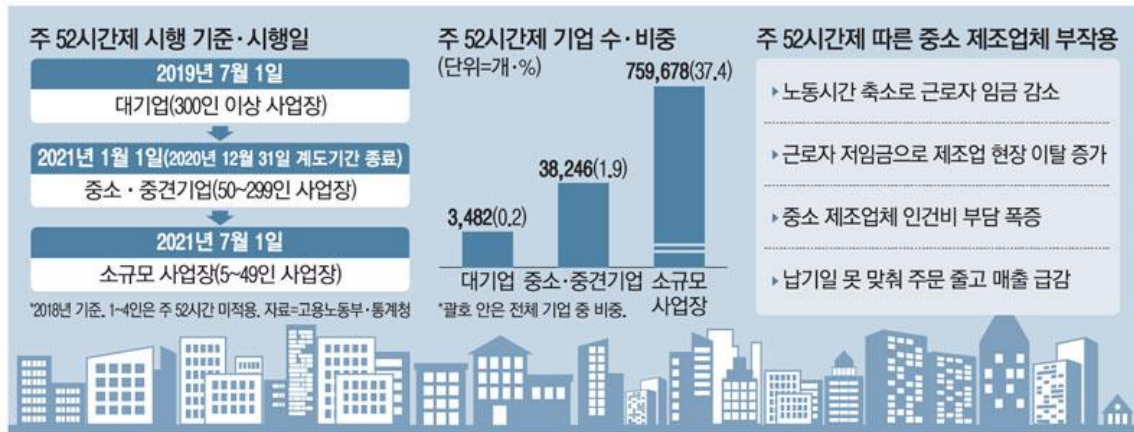
4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온라인 사업 강화, 신규 아이템 개발 시도, 신기계 도입

<자료: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결과(노동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발표집)>

실패 2 : 주 52시간제

임금 감소 + 인건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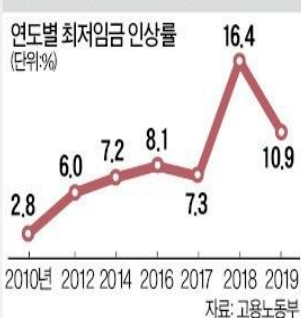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 : 악순환 고리를 타고 실종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가계소득 증가 소비 촉진 기업 생산 증가 투자 확대 경제 성장 임금 상승 가계소득 증가

정부 의도 빚나간 소득주도성장 '악순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위축 고용 축소 가계소득 감소 소비 둔화 생산·투자 약화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르고



고용은 줄고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는 줄고



II. 포용 복지 : No Solution

포용적 복지 개념과 정책 목표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40)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22.3(17) → 15.0%(40) ◆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상대빈곤율 완화 17.4%(17) → 11.3%(40)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조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중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건강수명 연장 73세(16) → 78세(4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투자 비율 확대 5.7%(15) → 10.7%(40)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실패 1 :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

5분위 배율 : 2016년 6.24배 → 2019년 7.40배

(단위: 배)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3	5.55	5.26	5.52	5.30
2004	5.70	5.08	5.54	5.67
2005	6.03	5.36	5.54	5.47
2006	5.91	5.35	5.70	5.54
2007	6.10	5.40	5.74	5.55
2008	6.16	5.44	5.69	5.52
2009	6.49	5.41	5.71	5.46
2010	6.16	5.13	5.46	5.18
2011	6.06	5.08	5.46	5.39
2012	5.81	4.94	5.14	5.25
2013	5.49	4.80	5.17	4.71
2014	5.38	4.71	4.88	4.72
2015	5.12	4.31	4.55	4.46
2016	5.23	4.59	4.91	4.69
2017	5.68	4.89	5.38	4.80
2018	6.31	5.50	5.78	5.70
2019 ^a	6.19	5.60	5.69	5.51
2019 ^b	5.51	4.69	4.83	4.80
2020	5.61	4.25	4.92	4.81
2021	5.20	4.67		

실패 2 : 빈곤율 : ‘병’ 주고 ‘약’ 주고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단위: %)

시장소득 빈곤율 악화

가처분소득 빈곤율 개선

장애인: 가처분소득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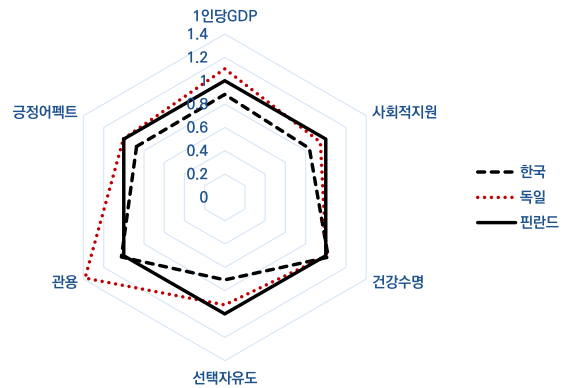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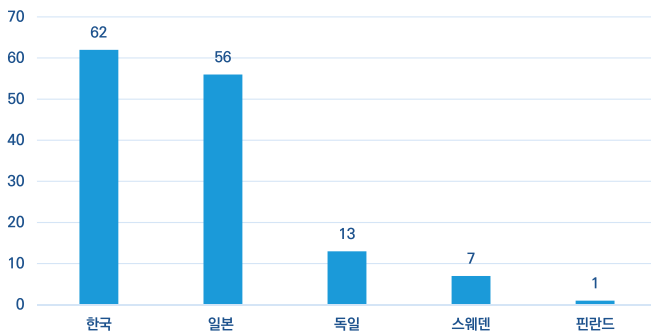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	시장소득	58.7	58.4	59.9	59.8
	가처분소득	43.6	42.3	42.0	41.4
아동	시장소득	15.5	14.5	13.1	12.1
	가처분소득	15.2	14.2	12.3	10.6
청년	시장소득	11.0	11.4	10.6	10.9
	가처분소득	10.4	10.6	9.5	8.9
장애인	시장소득	49.7	51.8	54.6	56.0
	가처분소득	40.6	40.3	41.5	42.0
취업자	시장소득	14.0	14.1	14.3	14.4
	가처분소득	12.0	11.8	11.4	10.8
여성 가구주 가구	시장소득	43.6	43.3	43.4	44.0
	가처분소득	37.9	37.1	36.7	35.9
한부모 가구	시장소득	48.2	48.6	49.1	44.9
	가처분소득	42.3	38.7	38.6	30.1
1인가구	시장소득	58.8	58.5	58.9	59.6
	가처분소득	54.0	52.1	52.7	51.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패 3 : 국민행복도 : 진전 없어

2021년 세계행복순위 : 62위 / 2017년 행복순위 : 56위

행복순위 (2021년)



실패 4 : 문재인케어 보장률 목표 70% 달성 불가능

[건강보험 보장률] 2017년 : 62.7%, 2018년 : 63.8%, 2019년 : 64.2%

문재인 케어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상향 목표
-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 유지하고 2018~2023년 5년간 41조5,842억원 투입

주요 정책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하향
- MRI 초음파 급여 대상 척추, 근골격, 흉부, 심장, 혈관으로 확대
- 난임시술 연령 폐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 (단위=조원)



이르면 2024년 고갈되는 건강보험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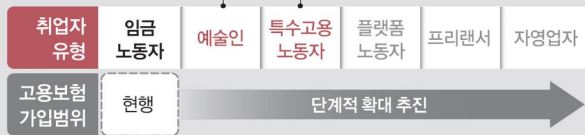


실패 5: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시기 오류 + 기금 고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 계획

-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국민(취업자)으로 단계적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우선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전망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 전망



자료/ 고용노동부

연립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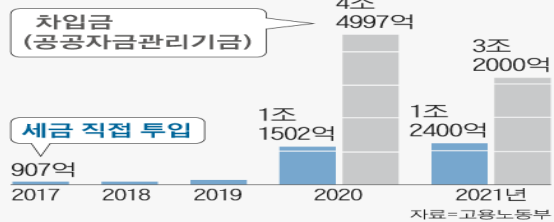
예술인 고용보험 : 2020년 12월

→ 보험료 9개월 납입해야

특고종사자 : 2021년 7월

→ 보험료 12개월 납입해야

고용보험기금에 투입된 세금·차입금 추이
단위: 원



자료=고용노동부

실패 6 : 2021년 고용보험 기금 고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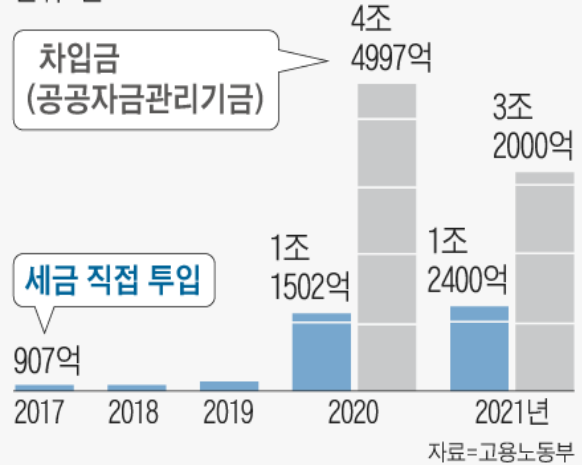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순 기금

2020년: 2조 8022억원

2021년: -2조 3744억원

고용보험기금에 투입된 세금·차입금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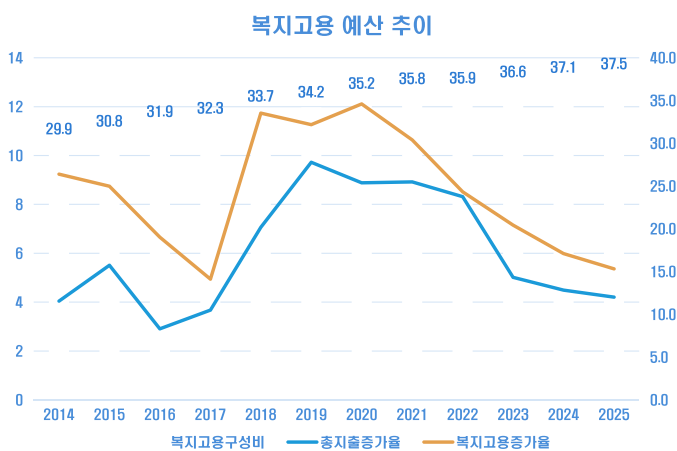


자료=고용노동부

Ⅲ. 국가 채무 : No Responsibility

실패 1 : 수퍼 정부 : 국민부담률 급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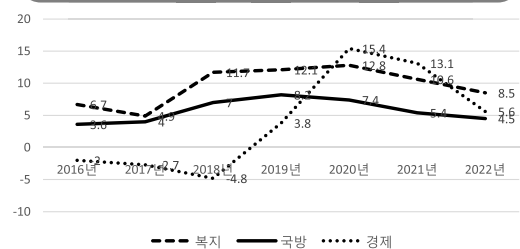
복지지출 증가 추이



2014-2025년 국민부담률



부문별 예산 증가율 추이



실패 2 : 국가채무 : 2021년 채무비율 50% 육박

2020-2025년 중기 재정계획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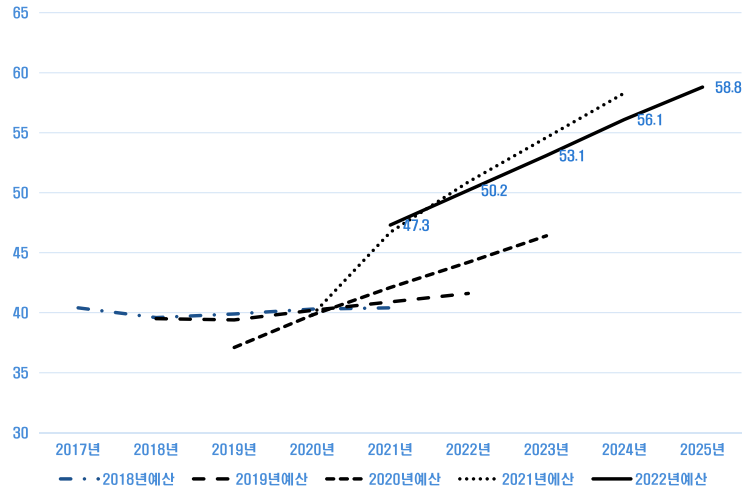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 재정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
○ 외무지출	266.1	279.1	301.1	311.7	327.0	342.7	6.5
(비중)	(47.7)	(46.1)	(49.8)	(49.1)	(49.3)	(49.6)	-
○ 재량지출	291.9	325.8	303.3	323.0	336.2	348.4	4.5
(비중)	(52.3)	(53.9)	(50.2)	(50.9)	(50.7)	(50.4)	-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 재정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 세외수입	28.9	29.3	26.7	27.4	28.4	30.0	0.6
○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9.9	197.7	205.4	4.7

* '21년 2차 추경 대비 증가율 ('21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재정수입 6.4%, 국세수입 7.9%)

국가채무 5개년 계획 (GDP 대비)



실패 3 : 적자 재정 구조 고착

관리재정수지 = 100 조원 내외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본예산	2차추경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GDP대비, %)	(△3.7)	(△4.4)	(△2.6)	(△2.9)	(△3.0)	(△3.0)
※ 관리재정수지	△112.5	△126.6	△94.7	△104.7	△108.4	△109.2
(GDP대비, %)	(△5.6)	(△6.2)	(△4.4)	(△4.7)	(△4.7)	(△4.6)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대비, %)	(47.3)	(47.3)	(50.2)	(53.1)	(56.1)	(58.8)

실패 4 : 공무원연금 등 총당부채 : 1044.7조원



연금총당부채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i@joongang.co.kr

✓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829.8조원

→ 전년 대비 **71.4조원 증가**

✓ 군인연금 총당부채: 214.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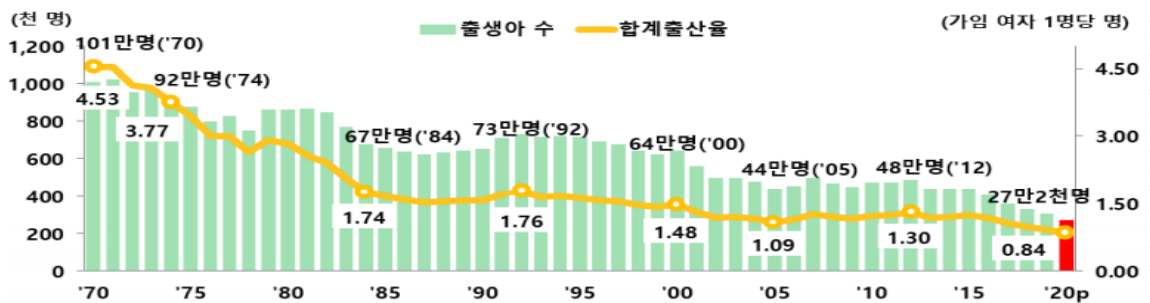
→ 전년 대비 **29.1조원 증가**

IV. 저출산·고령화: No Future

2020년 출산율 : 0.84 → 세계 최저 수준

- ✓ 2017년 (출산율=1.05)에 이어 2018년 (출산율=0.98), 2019년 저출생 현상 지속 (출산율=0.92)
- ✓ 2020년 저출생 지속 심화 (출산율= 0.84), 출생아수 27.만명 수준으로
- ✓ 2020년 인구 감소의 원년 : 사망자 > 출생자
- ✓ 2020년 출생아 수 북한(30만명 정도)이 대한민국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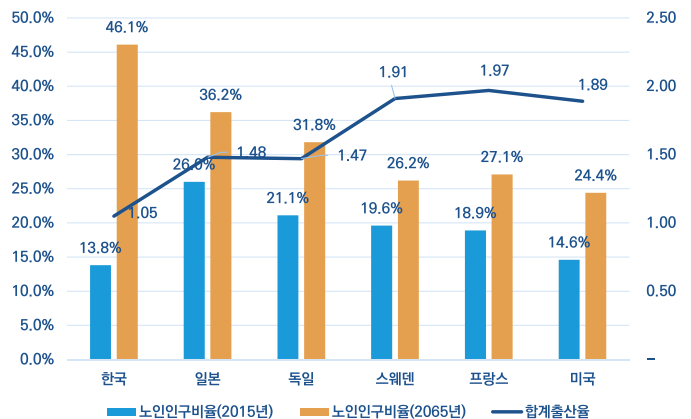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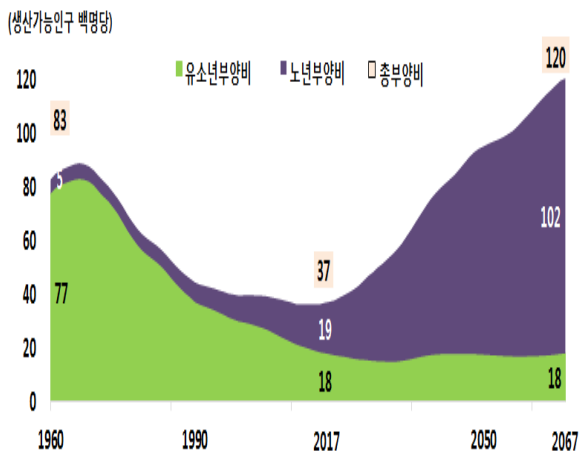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p



2050년, 한국이 세계 최고령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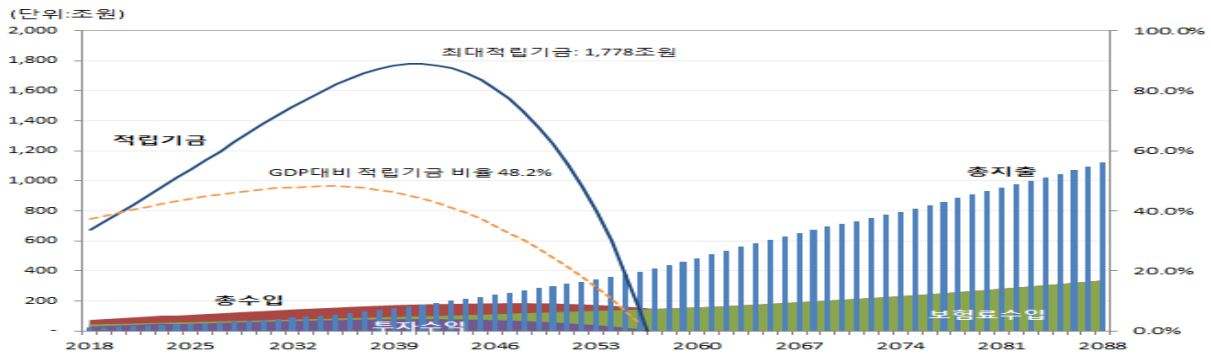
노년부양비 100을 초과

주요국의 2015-2065년 노인인구비율 비교 (저출산 문제)



2057년 국민연금 기금고갈 → MZ세대 연금은?

○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 적립기금 고갈 2060년 → 20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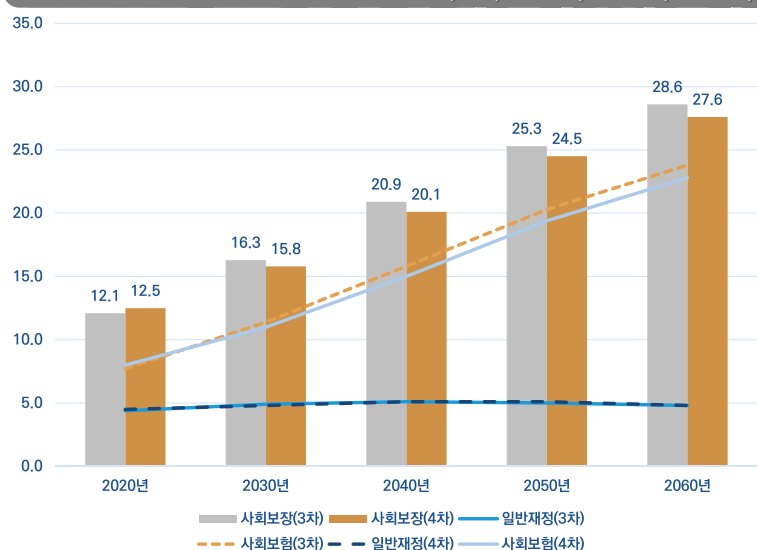


- ✓ 향후 70년 (2018~2088년) 재정전망
- ✓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 중첩

2060년,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 : 27.6%

-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지출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의 12.5%에서 2060년에는 27.6%로 증가 (GDP 대비)
- ✓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2020년은 12.1%보다 높은 12.5%로, 2060년은 28.6%보다 하향된 27.6% 전망
-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과 비교하면 높은 훨씬 더 높은 수준임
- ✓ 차이는 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부담의 포함 여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지출 전망 비교 (3차(2018년) vs 4차(2020년))



V. 포퓰리즘 대응

1 사회보험 재정 총체적 점검 필요

● 연금보험 재정 불안 요소 잠재

- ✓ 국민연금 장기재정 불안 가속화
- ✓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효과 감소, 군인연금 제도 개편 지연
- ✓ 사학연금 장기재정 불안 요소

● 건강보험 등 보험 재정 불안 증가

-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 고용보험 급여 지출의 빠른 증가
- ✓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보장

2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과 부담

-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
 - ✓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에 의한 복지부담 증가
 - ✓ 건강보험 등의 재정위기 급속 고조와 정부책임 증가 가능성
- 남북한 대립 혹은 통합 모드 어느 쪽이나 재정부담 증가
 - ✓ 대립의 경우에는 국방비 등의 증액 필요
 - 화해 분위기 조성과정에서 분담금은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
 - 중간모드에서도 통일대비 기금 적립 필요성

3 BIG 정부 vs SMALL 정부: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 ✓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 ✓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 ✓ 각국의 양적 확대 정책 혹은 세출 확대로의 선회 등 동향 주시
 - ✓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4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 ✓ 2021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51.8조원, 급여지출은 29.2조원
22.6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ding-out
- ✓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11.9%(2020년)로 최근 증가 추세

●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 급속히 증가
- ✓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 급속 증가

●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5 국가 경제정책 목표 '완전고용'중심으로 전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 ✓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 ✓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 ✓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부동산 경기 진작책 등은 신중한 추진 필요
- ✓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6 국가부채 종합관리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의 관리가 핵심

-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 ✓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 ✓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 산입
 - ✓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 산입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
 - ✓ 일본 반면교사: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 차단 필요
- 복지지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함

7 잠재적 국민부담률 관리 필요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 ✓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 ✓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 ✓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 사회보험료 vs 조세
 - ✓ 국가의 책임 영역 (Anti-Poverty) ⇒ 조세
 - ✓ 국민의 책임 영역 (Income Protection) ⇒ 사회보험료
 - ✓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 재검토

8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30% 접근

- ✓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한계
- ✓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 수립 필요
- ✓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 새로운 재원 방안 필요

- ✓ 현재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 등)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
- ✓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수 감소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
- ✓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 영향
- ✓ 사회보장세 도입 검토 필요성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부가세 형식)

VI.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1 사회안전망 체계화

- 선별적·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 구축
-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 ✓ 사회보험료 납입능력 부재에 따른 광범한 사각지대의 축소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필요
- 사후적·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
-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 구축

2 생애주기적 노동 · 보건 · 복지 서비스의 통합

-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 구축
- 평생에 걸쳐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정비
-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
-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고용창출 성장 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
 - ✓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
 - ✓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함.
- 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 시켜 사회적 후생 증대
- 공공재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 『경쟁 및 책임경영』시스템 도입
 - ✓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4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 중복적 급여와 제도 통합
-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統合せ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
- 노동, 보건, 복지의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 제고
 - ✓ 수요자의 노동, 보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히 통합하여 비용효과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 1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 2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 구축

5 복지재정지출의 적정 관리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GDP의 12.5% 수준이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30년에는 GDP의 15.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2020년 현재의 OECD국가 평균과의 격차(약 6.5%p), 2040년경 20.1%로 증가하여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GDP의 7.5%p 정도 상향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재정지출이 GDP의 5.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은 GDP의 6.6% 수준으로 예측 (2030년)
- 보육, 가족 등에 대한 지출은 2020년 GDP의 1.0% 선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DP의 2%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 등 기타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GDP의 1% 정도 지출

VII. 맺는 말

맺는 말

-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를 거치치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하는 전략 수립 필요
 -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수지 회복 노력
 - 재정위기 대응방안으로 연금개혁 등 복지분야 개혁조치 실시
 -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적 부담 증대
 - ✓ 남유럽 복지국가의 실패사례, 고령화사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일본 사례, 영국 등 유럽 복지국가의 개혁사례 등
- 복지시스템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
 - ✓ 복지는 교육과 고용 그리고 분배구조를 포함한 경제 시스템과 밀접한 유기적 관계 형성

맺는 말

-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 ✓ 국민경제적 부담 최소화, 실현가능한 단계적 재원 계획 구상
 - ✓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 개혁 병행
-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 선택 필요
 - ✓ 조세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재원조달방식에는 한계 존재
 - ✓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하는 전략수립 필요

맺는 말

-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 필요
 - ✓ 복지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어도 이를 충당할 자원 조달 계획이 없으면 무의미
 - ✓ 2060년에는 복지확충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의 두 배 이상인 GDP의 27.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불가피
-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성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 ✓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
 - ✓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토 론 문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전 대한민국 국회개혁위원 역임

전 통일부, 행안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복지 포퓰리즘 의제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의 의의

1. 복합 국가의제로서의 ‘복지문제’

복지문제는 현대 국가의 가장 난해하고 복합적인 ‘국가의제(national agenda)’다. 김용하 교수의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현대 국가의 복지 문제에서 ‘포퓰리즘’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이슈는 공공정책, 정책거버넌스의 문제를 넘는 가장 근본적이며 역동적인 수준의 ‘정치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모든 주요 국가의 정치적 경쟁과 정부의 선택을 좌우한다.

2. 포퓰리즘, 가장 근본적인 정치(학)적 문제

한 국가의 정치, 혹은 통치 과정은 그 자체가 populism 에 근거한다. 동양 사상에서의 정치의 존재성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위민(爲民)에 둔 오랜 전통이 내려왔고, 르네상스기 현실주의 정치사상의 거두 마키아벨리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인민의 안전확보와 복리향상”에 두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원칙을 세운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는 모두 정치의 존재이유, 통치의 목적 그 자체가 populism 이었다. 문제는 정당한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타락한 포퓰리즘인가의 선택문제,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문제이다.

3. 현대국가 포퓰리즘의 정치적 성격

문제는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선진국가의 척도가 복지국가가 된 이후에, 복지는 선동적 정치지도자(세력)들이 선거 과정에서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용하면서 “국가능력과 민생복지가 불균형 상태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국가능력, 선거민주주의, 복지정책의 선심주의(인기영합주의) 경쟁의 복합적 정치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과도한 인기영합주의 정치와 정책은 특히 남미

국가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고, ‘포퓰리즘’은 대개 남미 독재국가의 권력운용 수단이자 시민사회의 불안정, 개인적, 집단적 모럴해제드의 원천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적 산업화, 선거민주주의의 경쟁성 심화와 더불어 ‘복지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파적 경쟁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 맹목화되고 교조화되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재정증대와 재정누수, 국가주의에 의한 제도화된 부패의 문제가 엄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4.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과 토론, 공론의 형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교수께서도 “복지 포퓰리즘의 정치학적 문제와 쟁점”이라는 차원의 연구영역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감하며, 아래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필히 한국의 정치지도자, 정당 및 정책담당자들이 “복지 포퓰리즘”의 남발을 제어하고 국가능력 부합하는 한국형 복지정책과 전달체제의 수립, 복지 수요와 재정 대응의 합리성을 갖춘 정책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토 론 문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세인트클라우드주립대 조교수

위치타주립대 조교수

네브라스카 주립대 행정학 박사

복지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재정적 관점에서-

1. 복지 **포퓰리즘**

-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은 복지정책 집행에 있어서 저부담 (혹은 무부담) 고복지를 의미 (발제자 정의)
- 저부담 고복지의 경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 가능
 -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financial sustainability)에 어려움이 예상 됨
 - 즉, 재정지출(예: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적자재정 (debt financing)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표1: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채무(GDP 대비 %)		666.9(38.9)	708.2(39.5)	741.0(39.4)	790.9(40.2)	843.0(40.9)	897.8(41.6)
적자성 채무(%)		384.6(57.7)	411.6(58.1)	426.8(57.6)	468.1(59.2)	519.1(61.6)	579.9(64.6)
	일반회계 적자보전	298.8	327.2	348.2	394.7	451.3	518.8
	공적자금 국채전환	47.6	46.7	44.4	39.6	34.2	28.2
	지방정부 순채무 등	38.2	37.8	34.2	33.8	33.6	32.9
금융성채무(%)		282.2(42.3)	296.6(41.9)	314.2(42.4)	322.7(40.8)	323.9(38.4)	317.9(35.4)
	외환시장 안정용	223.0	235.5	247.3	260.4	273.1	286.2
	서민주거 안정용 등	59.3	61.0	66.9	62.3	50.8	31.7

*국가채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

일반정부부채: 국가채무 + 비영리공공기관

공공부문부채: 국가채무 + 비영리공공기관 + 비금융공기업

- 재원 부족 시 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부정적이지만은
않음
- 공채 발행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 공채 발행이 타당
- 국채 발행을 통한 조세 부담 경감에 따른 총수요 팽창 vs. 국채 발행
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 및 그에 따른 구축 효과
- 현 세대 부담 vs. 미래 세대 부담

2. 행정의 역할

□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은 기획(planning)과 통제(control)의
기능을 가짐

○ 기획의 관점

- 국가채무 관리계획

가. 세입과 세출의 동시 고려 (양출제입 & 양입제출)

- 세입과 세출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려
- 예산 규모 증가율 > 경제성장률 in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
- 채무 축소 의무 부과

나. 법안비용 추계

- 예산과 법률과의 연계 강화 (예: 예산법률주의)
- 미국의 Authorization Act
(의무지출을 법률화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다. 세계잉여금의 합리적 배분

-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라. 추가경정예산의 제한

- 매년 반복적 편성의 경우 방만한 재정 부담을 초래

마. 총사업비 관리의 적정화

- 원가회계 및 타당성 조사 활용

○ 통제의 관점

- 재정준칙(fiscal rule)의 마련

*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 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 운용 정책을 의미

가. 채무준칙

나. 재정수지준칙

다. 구조적재정수지준칙

라. 지출준칙

마. 수입준칙

- 독립적 재정기관의 운용

*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의회에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중심의 구조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평가 받고 있음

3. 정책적 제언 (재무행정의 관점에서)

□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에 대한 고려

○ 정의 (점진주의 지양)

-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편성부서의 모든 사업에 대해 종합평정표를 작성

- 이를 바탕으로 원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

○ 방향 (중복사업 및 재정누수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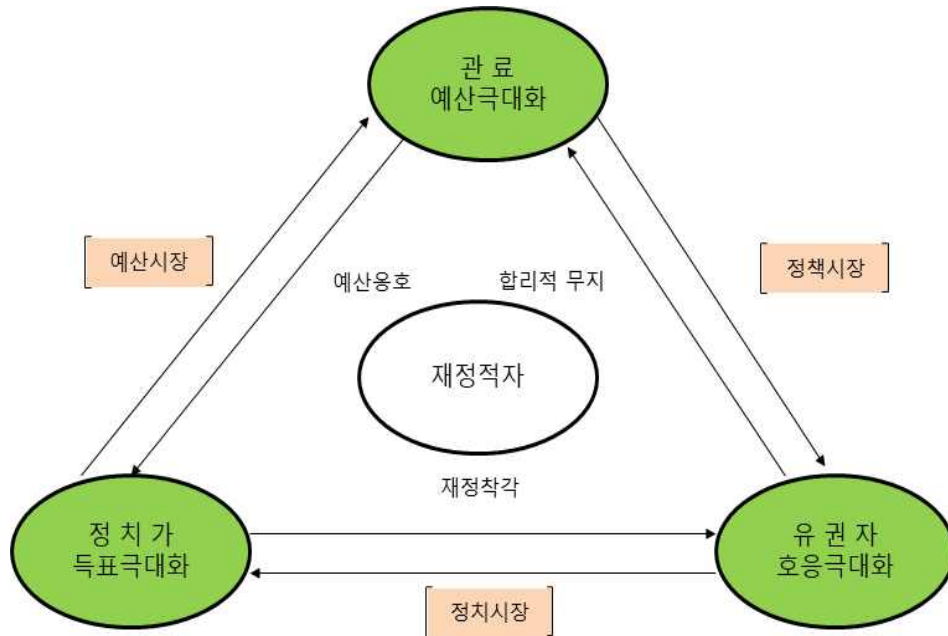
- 배분적 효율성 제고

- 관리와 계획의 통합 강조

- 계획과 예산의 연계

- 분권적 결정

□ 재정민주주의 제고



-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노력
- 주민투표에 의한 정책 결정

토 론 문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現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독일 브레멘대학 대학원 사회정책학 박사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의 사례

좌파 군인 출신인 차베스는 1992년 군사 쿠데타에 실패했으나 대중의 지지를 얻어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통치하였다. 차베스는 집권 시절 국부의 원천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기업을 대거 국유화했고, 2005~2017년 베네수엘라에서 국유화한 기업은 모두 1,359개에 달한다(한국일보, 2020년 1월 1일). 차베스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번 오일 머니를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과 저가 주택 제공 등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을 체험하고 있다.

2014년부터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4%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2015년부터 폭등해 2015년에 7.4%, 2016년에 20.6%, 2017년에 27.1%, 2018년에 33.3%를 기록하였다.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전에도 항상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 111.8%, 2016년에 254.4%, 2017년에 1,090%, 2018년에 13,860%의 살인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인구의 94%가 절대빈곤 상태이며, 3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다(서울경제, 2019년 3월 29일자). 경제 파탄, 치안 불안과 살인적 물가상승으로 6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21세기 사회주의: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워 국가 시스템을 개조한 차베스의 사회주의 실험 때문이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실험은 무상복지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행해졌다. 차베스는 집권 후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개정하였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입법부를 장악했다. 또한 사법부의 좌경화, 미디어 검열로 언론 장악, 선관위 장악과 선거제도 악용, 민중 자치 교육과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의 추진이었다. 차베스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업의 노동자와 국가 공동소유를 확립하고 노동자 집합체(협동조합)가 정부와 협의하여 자주관리에 의해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차베스는 집권 과정에서 점차 급진화되어 사회주의적 기업의 설립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적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자 통제를 지원하는 발전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기업경영과 기본 정책이 결정되는 ‘자주관리사회주의’는 자본가를 대신한 새로운 특권계급의 등장과 비전문성, 비효율로 인하여 지속할 수 없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좌파 교육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원형인 민중자치 교육은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경제민주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는 교육을 자본주의적 가치에서 해방시키려 하였고, 볼리바르식 사회주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차베스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에는 3분 이상 샤워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주택정책도 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과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 부동산감독기구의 설치와 판박이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임대감사국이 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정해주는 직접 가격통제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대료제와 비슷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1년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전 퇴거를 강제하지 못하게 ‘임의적 퇴거금지법’을 도입했다. 최근 전세 폭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외국에서 유일한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에 비교된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 감독원의 신설은 또 하나의 ‘옥상옥’ 수사기관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책은 대실패로 결론이 났다. 반시장적 규제의 반작용으로 ‘임대 암시장’을 형성시켜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3법이 전월세가격 폭등과 같은 임대 시장의 불안정을 키운 것과 마찬가지로.

<https://www.youtube.com/watch?v=mcrlcJdsiEg>.

2020년 12월 18일 EBS Documentary

가난하려면 가난할 수 없는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경제 대국을 무너뜨린 하이퍼인플레이션 사태 다큐프라임 - 혼돈의 시대 중앙은행

자동차 기름 33 Liter 가격: 칫솔 한 개, 쌀 한 봉지, 우유 하나

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소멸:블레이드 러너 2049 vs 복지국가 2049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 마틴 포드 교수는 2015년 ‘로봇의 부상’(Rise of Robots)이란 책에서 기계가 노동자가 되면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

진다고 예언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미 200년 전부터 있었다. 디지털혁명이 고용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의 형태가 달라지고 직업구성은 변화하겠지만,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100년 이상의 장기적 추세를 관찰한 결과 기술 발전이나 산업혁명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허재준, 2021).

미국의 1980년대 이후 30년간 컴퓨터 기술 진보와 관련한 연구에서 고학력 비 루틴 인지 직업군과 비 루틴 육체 노동군은 증가하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이루어진 중간소득의 루틴 작업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최창옥, 2021). 이러한 결과는 신형 컴퓨터가 구형 컴퓨터를 밀어낸 것과 같은 생물학적 진화 메카니즘의 작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1982년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 1탄이 상상한 미래는 37년 후인 2019년 LA이지만 스모그와 산성비로 가득한 영화 속 LA와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2017년에 32년 후의 세계를 묘사한 블레이드 러너 2049년이 2탄으로 나왔지만 2049년에도 인조인간인 레플리칸트(Replicant)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복지국가 2049를 위해 인구사회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다.

3.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의 추진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를 제시하였으나, 소득양극화를 비롯한 소비양극화, 자산양극화 및 주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이고,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율 등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정체 혹은 오히려 악화되었다(통계청, 2020).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 시장소득에 의해 분배가 개선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악화된 불평등을 세금과 정부 부채로 댄질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빠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분배 격차가 확대되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올해는 같은 시점에 지급되지 않자,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것이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재분배정책 외에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급등과 52시간 근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어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다. 청년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없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으나, 사회보험과 노동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저임금 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 기준의 완화로 2019년 188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수급률은 3.6%에 머물러 여전히 사회보장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등교 정상화가 지연되고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79%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복지 파탄은 ‘소득주도성장’의 고집과 코로나19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버드대학 로버트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바 있다(한경, 2019.12.09.)

4. 증가하는 복지재정과 지체된 복지 개혁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17년 130조에서 2022년에는 217조로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67% 증가하였다. 2050년 고령자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며, 향후 사회보장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20년)에 따르면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40년 20.1%에 이르고, 2060년 27.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18년도의 제3차 추계에서는 2060년 예상치가 28.6%). 현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2060년에는 스칸디나비아국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 장기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8대 사회보험 중 7개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힘든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였다.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으로는 재원 조달의 한계가 명백하므로,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구조 개편의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5. 개혁의 방향

☐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필요한 복지 달성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식어버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고양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은 성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확립이 복지 포폴리즘의 일정한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재정준칙의 확립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국가경제가 튼튼해졌다. 이것이 공적 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이 풍요해지는 큰 복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도 사회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근본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 경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높은 재산세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경제의

정체가 심화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4년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2007년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2008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폐지하였고, 2020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하였다. 스웨덴은 강력한 재정준칙, 연금개혁 및 기업친화적 감세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GDP대비 25% 순부채에서 2007년 GDP 20% 순자산국으로 전환하였다. 스웨덴은 미국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경제 자유의 부여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 진화론적 복지의 발전: 안심 소득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대상자의 확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진화론적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점진적 방법으로 빈곤의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00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형 EITC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CTC)이 도입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2009년 59만가구에서 2019년 506만가구로 8.6배 증가하였고, 지원액은 2009년 4,500억원에서 2019년 5조1,100억원으로 11.4배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도입 20년만에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여전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2018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3만명 가까이가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이 704만 여명으로 추산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주장자마다 입장이 상이하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중위투표 전략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부

자에게는 의미가 없고, 가난한 이에게는 너무 작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에 역진적이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뺏아서 중산층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로서 정의와 배치되며, 사회적 배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구성원리와의 충돌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국의 위치는 남유럽과 유사한 복지체계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빈곤의 구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안심소득제가 등장하였다. 안심소득제는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유인 저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6년 박기성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안심소득제는 가구의 소득과 기준 소득과의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리드먼은 부의 소득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과,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76.9%의 주민이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기존의 각종 복지제도를 철폐하고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기존 복지수혜자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안심소득제는 현행의 공제·감면·면세 등 소득세제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자활급여의 3개 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의 총 5개 급여를 확대 개편한다.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 복지제도(Pan-welfare System)”라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해체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진화론적 관점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되더라도 복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60년 27.6%에 도달하여 스웨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예산 조정 혹은 조세감면 등을 통한 자원 조달로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재정지출구조 개혁이나 소득세제 공제항목 정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규모도 얼마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R&D를 위한 조세감면과 기부금 공제 등도 제도적 필요성으로 인해 축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 배터리 투자 사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1조5천억 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4%로 OECD 평균인 33.8%에는 6%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하여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2014년 17.1%에서 5년 새 3%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9% (2018년 기준)와 약 5%의 격차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퍼주기에만 몰두했고 자원 조달 방안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 증세는 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핀셋 증세’와 징벌적 재산세를 통해 2018~2022년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16조 원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9년 705만 명으로 면세비율은 36.8%에 달한다.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조세의 공평성을 악화시킨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해 지금부터 증세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조세부담율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20% 수준에서 OECD 평균인 2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OECD국가와 비교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의 비중을 높이는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OECD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행의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 가운데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및 이를 위한 증세에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자신들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양재진·윤성원·장우윤, 2021). 이를 통해 보편적 증세에 관한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증세 문제는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합의점을 찾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스웨덴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수

스웨덴 예테보리대 정치학 박사

런던정경대 박사

스웨덴 쇠테르텐대학교 정치학 교수

복지정책의 평가

- 복지정책의 평가기준
- 복지재정의 평가
- 투명성 및 공정성
- 복지재정능력의 평가 시대적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
-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의 이론적 정의와 평가

복지정책의 평가 (1)

- 광의적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복지지출에만 국한 된 정책이 아니라 사회보장체계의 큰 틀에서 이해가 필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효과, 의료, 보건, 교육 등 현 세대적
요구 뿐 아니라 미래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
- 불요불급한 복지수요에 쓰여지고 있는가?
- 사회적 불안 요소와 갈등의 해결
-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순위
- 복지수요의 이해: 현재 복지수요와 미래 복지수요에 대한 예측

복지정책의 평가 (2)

- 지속가능성
- 복지재정 능력의 평가
 - 국가재정수입과 지출
-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의 이해
- 시장의 성장동력
- 기업활동의 활력
- 국가채무와의 관계
- 조세제도의 형평성, 투명성의 유무
-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들이 없음 – 정권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은 이를 불가능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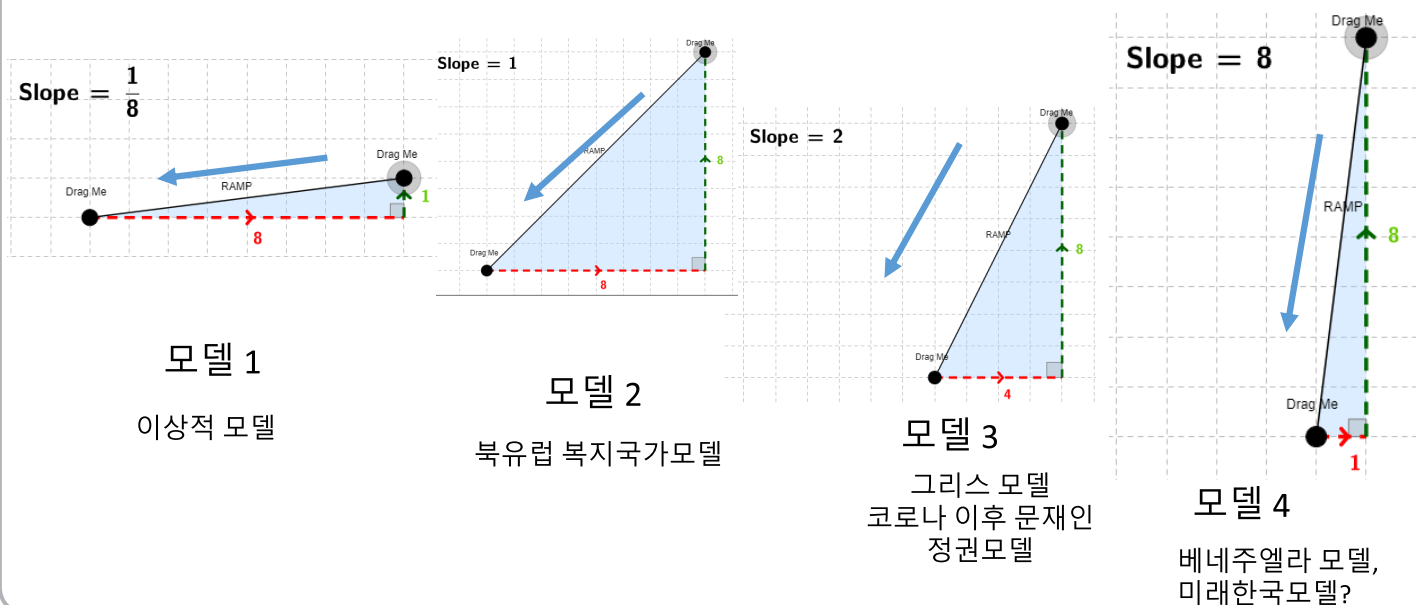
복지국가구축의 장기비전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구축은 1928년 국민의 집 의회연설에서 시작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기 사회정책 (경제개발 5개년처럼 사회정책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어 온 정책 – 4개년 계획이란 한 정권의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 후 진행하면서 이루어짐)
- 복지정책은 보편성과 선택성의 황금분할을 통해 조화됨
(북유럽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맞지 않음)
-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국민의 기본권
- 자발적 세금신고,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국가가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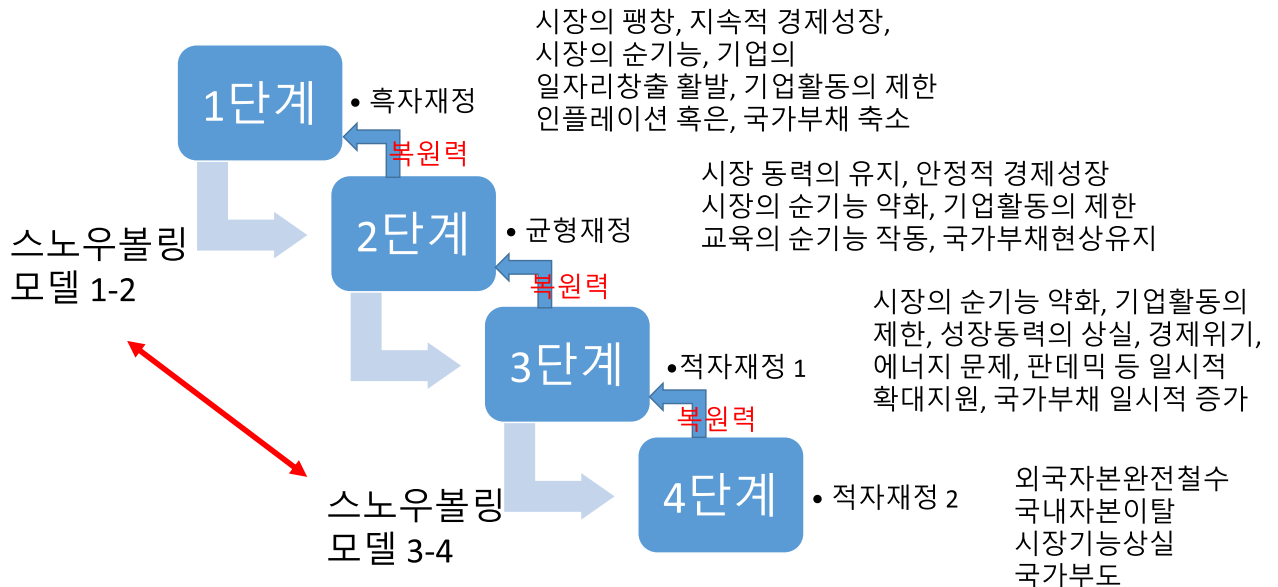
인기영합주의적 정책

- 이론적 정의: Jan-Werner Müller (2016) *What is populism?* 단기적 목적으로 미래의 고민없이 국민의 편을 가르거나 갈등을 유발해 이익을 보려는 정책; 기존 세력은 무능하거나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최적자라고 믿는 믿음 체계에 바탕을 둔 선한 정책으로 위장; 민족을 강조하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지세력의 결집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정책; 상대방은 무능 혹은 악으로 간주
- 평가기준: (1) 책임의 전가 유무 (2) 미래의 지속적 성장 혹은 유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의 유무 (3) 개인의 자발적 능력개발과 교육 등 미래지향적 사회투자의 유무
- 인기영합정책의 원인에 대한 분석: 통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재집권과 상대세력의 무력화에 더 큰 관심

복지재정 능력의 한계모델: 스노우볼링 효과 (기울기 효과)



복지재정 환경의 단계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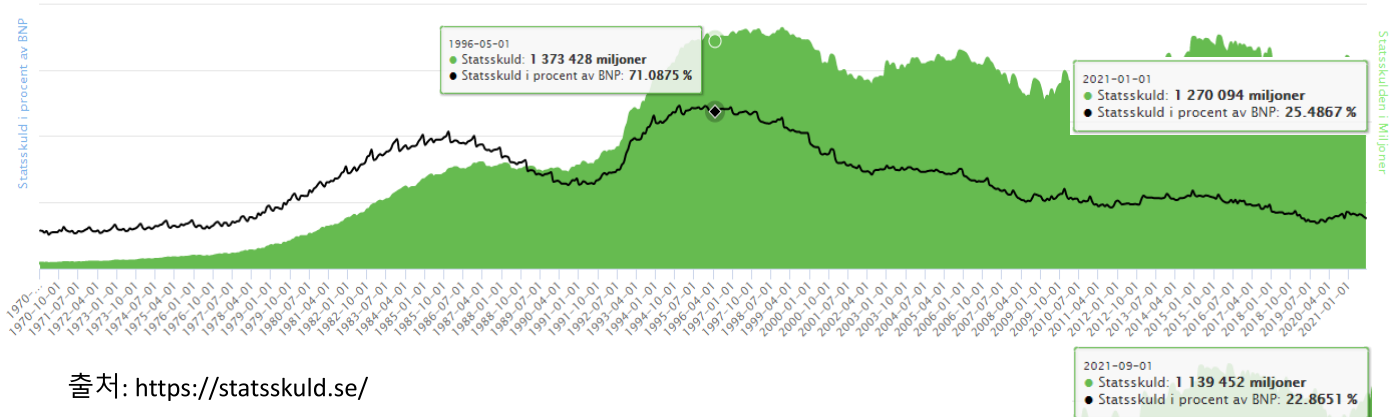


북유럽 국가복지정책의 특징

- 고부담 - 고복지의 틀
- 미래 재정고갈이 될 연금개혁을 위해 1957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택권을 국민에 줌으로서 집단간 갈등을 최소화
- 1970년대 1500여개의 시군구를 290개 컴뮌(Kommun)으로 축소하는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행정의 지방이양. 탁아소, 유치원, 초중고의 교육의 지방책임제 (국가는 중앙교육청의 교육의 질 감독 기능 보유),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시설 등 지방으로 완전 이전. 재정독립을 위해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병원과 1차 진료소의 국영화 진행.
- 1970년대부터 고세금을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공동기여, 공동책임, 공동혜택의 틀을 놓음. 가사노동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개인의 세금에 대한 인식 각인
- 복지는 신뢰에 기초를 함. 예를 들어 유사병가(괴병), 무자격 수혜자 등의 빈도수가 낮을 때 성공 가능.
- 교육의 복지연계. 무상교육, 극저리교육용자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이 무상이므로 실질적 생활지원금으로 사용)등으로 사회유동성의 확대.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 56세까지 학자금 용자를 통해 2모작 인생설계 가능 (40-50대 이직을 가능하게 함)
- 1991년 재정위기 시 급격한 복지축소를 통해 적자재정 문제 해소.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
- 현금지원보다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 프로그램 (코칭, 대학교육, YH(직업교육), ALMA 등 실습교육비 지원)

스웨덴의 국가채무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22.8퍼센트 (2021.9)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한 스웨덴의 제도적 장치

- 조세제도개혁-행정개혁 동시 진행- 1970년대
- 행정개혁을 통한 재정 및 서비스 - 자율권(autonomy)와 보완권(subsidiarity)의 확대
-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 의무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의 인상 등의 노력으로 재정문제 해결). 국가에서 천재지변이나 비통제적 비상상황시를 제외하고 지방재정적자의 지불유예나 특별지원은 없음.

- 다수집권여당의 전횡적 예산확장의 제도적 견제 장치 (예산법 2장, 예산정책의 목표와 방향)
 - 스웨덴의 경우 향후 3년 재정계획안 제출의무화 - 향후 3년 예산증가율 의회통과 의무
 - 춘계예산안(국가재정지출 계획안), 추계예산안(정책분야별 지출 상세안) 등으로 구분해 연말예산안 소계심사절차 간소화
 - 매년 GDP 3퍼센트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 이전 정권에서 결정된 것이라도 반드시 현 정권에서 따라야 함
 - 2007년 이후 GDP 1퍼센트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 대비한 버퍼의 운용.
- 연금개혁 -1957년 국민투표 후 노동수입과 연계된 연금수준차별화 및 다양한 연금의 일원화
(중앙공무원연금, 지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회사연금, 개인사업자연금 등의 통합)
- 1991년 재정위기 이후 정권을 초월한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좌우 5개 정당이 1980년대부터 참여해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주도함.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의회국방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등이 있어 초당적 협조체제로 운영.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 통일부『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7년 연속)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1. 10. 19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발표자 :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토 론 자:

1.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2.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3.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4.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축 사: 이 효 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본 연구회 이사)

2부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4116 성남일보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9320 한국NGO신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0201824522680634> e대한경제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20> 백세시대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복지연합신문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69> 시사포커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325> 충청일보

● 2021. 9. 15 (수)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토 론 자: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남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 원: 행정안전부

1부 사회: 안 자 희 부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92499/>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3805>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128449> 한국NGO신문
<http://www.snilbo.co.kr/44068>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171555584220949> e대한경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15001201> 뉴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053> 충청일보

● 2021. 8. 24 (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제발표자 :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前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자:

1.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국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4.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부 사회: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무국장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관련 언론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 매일경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복지뉴스
<http://m.snillbo.co.kr/a.html?uid=43991> 성남일보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대한경제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뉴스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디지털타임스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조선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72> 환경일보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제시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1Z2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대한경제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플리증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운넷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제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세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해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 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헌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레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홈페이지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촬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운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욱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중·노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일시: 2021년 11월 16(화)
- 장소: '아침고요수목원
- 참여대상: 중년 20명, 노년20명

2 토 론 회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제발표자: 최 균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주제: 차기정부의 복지관련 분야별 정책에 바란다-보건/고용노동/교육/주거
- 포스터 첨부

3. 자원봉사

- 일시: 2021년 12월 24일(금) 오후 1시
- 장소: 성남 모란 '안나의 집'
- 참여대상자: 남녀노소 불문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 미 령)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3) 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 시 2021.06.16 [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축 사 김 대 환 전 노동부 장관

격려사 이 갑 산 명예회장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주제 발표 김 태 기 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1.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2.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3.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 김 대 광 청년
(취업이후 창업)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유튜브, ZOOM 링크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ZOOM 링크  **회의 : ID 995 942 4971**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축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양 금 희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김 창 순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제 발표자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토론자

박 기 남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주 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생2형사회위원회
The Low Birth Rate Response Committee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플랫폼 토론회



일시 2021. 9. 15 (수) 오후2시30분

주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제

**차기 정부의 복지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발표자

김 원 식 교 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박 영 용 회 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 광 병 교 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인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이 상 철 실 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700조원 돌파한 국가부채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

일시 2021.10.19(화)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촉사 이 효 수 前 영남대학교 총장

발표자

김 우 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좌장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이 태 석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주 원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 영 숙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 창 룰 교수

(단국대학교 /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1부 사회

김 기 영 겸임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2021.11.10(수)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김 상 훈 국회의원

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토론자 조 성 환 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 정 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최 연 혁 교수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김 상 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부 사회 이 윤 진 교수(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복지공공연구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사회시민단체연합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일시 2021.12.10(금) 오후 2시 30분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최 군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용·노동

이 지 만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육

양 정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부동산)

서 진 형 교수
(경인여자대학교/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주최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협력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범사회시민단체연합
한국복지공공연구소 대구대학교 고려사회연구소

본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YouTube** 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10. 15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강화도 화도면 고구마캐기)



2021.10. 22~23 중장년층 농촌일손돕기 및 멘토링 공감여행(충북 보은 대추농장, 괴산)



2021.11.04. 양평용문사 야외공연장 제 7회 중장년세대 앙코르 한마당!
-힐링산책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